

구조조정이 복지 『패러다임』을 새롭게.....



延河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지

난해 말 우리에게 엄습한 경제위기의 한파와 함께 무인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해외자금의 차입으로 경제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의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적어도 올 한해는 저성장·긴축재정 및 고물가·고실업 등 우리 경제·사회 각 부문에 많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성숙되고 안정된 국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 세대간 괄목한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 부작용으로 외형적인 최고·최다만을 중시하는 『양(量)의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국가발전전략을 공동체적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식도 『질(質)의 가치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이 당장은 우리에게 ‘시련’으로 작용하겠으나 이같은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영국(1976년)의 경우 대처(Thatcher)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로, 멕시코(1995년)의 경우 정부의 긴축·안정기조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조조정기 복지부문의 과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일반국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하여

국민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

경제·사회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복지분야에서는 구조조정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일반국민은 물론 ‘빈곤의 악순환 고리’(Vicious circle)에 빠질 우려가 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일반국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하여 국민적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저성장·고실업·건축재정 등 외생적 충격의 제약이 놓여 있는 만큼 한편으로는 정부주도 지출중심의 단기적 처방을 추진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공급주체를 다원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정책과 고용복지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수혜적 복지’(Welfare)와 ‘생산적 복지’(Workfare)를 함께 지향하는 복지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훈련기회 및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DIY (Do-It-Yourself)』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하에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 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문별 조직기능을 재점검

하여 중복예산을 삭감하고 소모성 경상지출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복지행정기능 배분 등 효과적인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는 복지재원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들은 복지후생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적 화합에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의 구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분담(耐乏)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업·국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책임과 권한을 존중하는 동반자적 공동체 관계를 발전시키며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부터 과감히 재정과 조직을 경량화하는 솔선수범적 실천을 기대해 봅니다. 기업이나 국민들도 정부불신의 틀을 벗어나 불필요한 소비의 조장을 근절하는 등 내핍의 생활화가 요구됩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감을 되찾아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현명해져야 합니다. ‘저 언덕’(彼岸)에 오르는 길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